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별검사의 미이첩 사건 공소 검사·군검사 지휘권 신설 등〉

■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366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5
1.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중 관련사건 정의 규정 명확화 (안 제2조제3항 신설)	5
2. 파견검사·공무원 수 확대 및 수사기간 연장 (안 제6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	7
3. 특별검사의 미이첩 사건 공소수행 검사·군검사 지휘·감독권 신설 (안 제7조제3항 신설)	11
4.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안 제8조제7항 신설)	13
5.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 인계 (안 제10조제6항 및 제7항)	16
6. 형벌 등의 감면 규정 신설(안 제25조 신설)	19

※ 참고자료	21
1. 개별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 제정·시행 연혁	21
2. 역대 특별검사법 주요내용 비교	2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장경태의원 등 27인

나. 제 안 일 : 2025. 8. 26.

다. 회 부 일 : 2025.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바,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도를 규정하면서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소가 진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특검 수사의 목적과 충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검사·검사가 담당하는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지휘·감독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사와 공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파견검사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내란 및 외환사건과 같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의 진상 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며 이를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연장기간과 그 횟수를 늘리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도록 하며,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도록 함.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의 경우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 나. 파견검사의 상한을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 다. 군검사·검사가 담당하는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지휘·감독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7조제3항).
- 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안 제8조제7항).
- 마.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총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사건을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에게

인계를 하고, 국가수사본부가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제7항).

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정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

Ⅲ. 검토의견

1. 특별검사 수사대상 중 관련사건 정의 규정 명확화 (안 제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5.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동으로 하는 범죄 6.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호 및 제356조의 죄 7. 「형법」 제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8.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그 범위에 대해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특별검사제도의 장단점, 당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음.¹⁾

1) 헌법재판소 2008. 1. 10. 2007헌마1468 결정

2. 파견검사·공무원 수 확대 및 수사기간 연장 (안 제6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 ④ (생략)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u>파견검사의 수는 6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00명 이내로 한다.</u>	⑤ ----- ----- ----- ----- ----- ----- <u>파견검사의 수는 7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40명 이내</u> -----.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② (생략)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u>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u>	③ ----- ----- ----- <u>-2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u> ----- ----- -----.

- 개정안은 현행 ‘6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파견검사의 수를 ‘70명 이내’로 확대하고, 현행 ‘10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파견공무원(파견검사 제외)의 수를 ‘140명 이내’로 확대하며(안 제6조제5항),

현행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2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수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 현행법은 특별검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법 제8조제3항),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최대 60명의 파견검사와 최대 100명의 파견공무원(파견검사 제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6조제5항),

수사기간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법 제10조제2항),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고(법 제10조제3항), 그럼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1회에 한정해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법 제10조제4항).

- 그런데,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특검은 내란·외환 사건과 같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을 조사·공소유지하는 데에는 기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개정안은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려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16차례의 개별 특검법 중 특검 최대 규모는 현행법에 따른 특검(267명 이내)이고, 수사인력 중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규모 역시 현행법에 따른 특검(파견검사 60명 이내, 파견공무원 100명 이내)이 최대이며, 최장 수사기간도 현행법에 따른 특검(150일 이내²⁾)임.
- 현행법에 따라 동 특검이 최장 150일³⁾동안수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수사기간 연장 횟수가 ‘2회에 한정하여 각 30일’로 연장(+30일)될 경우 최장 180일⁴⁾동안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파견공무원의 수를 확대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는 현행법의 제정 목적, 수사대상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2) 원칙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준비기간 제외 기준)

3) 원칙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준비기간 제외 기준)

4) 원칙 90일, 연장 60일(30일+30일), 재연장 30일(준비기간 제외 기준)

<2025년 6월 시행된 3개 특검의 특검규모 및 수사기간>

구 분		현행법	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
특검 규모	합계	267명 이내	205명 이내	105명 이내
	특별검사	1명	1명	1명
	특별검사보	6명	4명	4명
	파견검사	60명 이내	40명 이내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100명 이내	80명 이내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80명 이내	40명 이내
수사 개시일		2025. 6. 18.	2025. 7. 2.	2025. 7. 2.
수사 기간 (준비 기간 제외 기준)	합계	150일 이내	150일 이내	120일 이내
	원칙	90일 이내	90일 이내	60일 이내
	연장	30일 (대통령·국회 보고)	30일 (대통령·국회 보고)	30일 (대통령·국회 보고)
	재연장	30일 (대통령 승인)	30일 (대통령 승인)	30일 (대통령 승인)

3. 특별검사의 미이첩 사건 공소수행 검사·군검사 지휘·감독권 신설(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 또는 군검사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 특별검사가 이첩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 ----- -----.

- 개정안은 특별검사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 또는 군검사가 공소를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를 수행하여야 함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소가 진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군사법원 등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특검 수사의 목적과 충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을 경우 「군사법원법」 대신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달리 되기 때문에⁵⁾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요구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정안은 군검사·검사가 담당하는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지휘·감독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사와 공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5) 대표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군사법원법」에 따라 경우 피고인이 공판준비·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준비·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강화되어 적용됨. “[단독] 내란 특검, 계엄 사령관들 군사재판은 손 안 대기로 가닥”, MBN, 2025. 6. 19. <https://www.mbn.co.kr/news/society/5120304>

「군사법원법」 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군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라 인정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 성립의 진정(眞正)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삭제

4.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안 제8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 ⑥ (생략) <u><신설></u>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 파견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의 지휘·감독 하에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없이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u>

- 개정안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파견검사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在廷)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신설).
- 특별검사는 현행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사대상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권한이 있고⁶⁾,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사 및 공소제기 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함⁷⁾.

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다만, 공소유지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도 포함한다.
2. 제8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현행법상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특검법 관련 규정의 해석, 특별검사와 파견검사의 권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⁸⁾
- 이에 개정안은 상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

8)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일부 발췌

1. 소송절차의 위법 여부와 피고인 2의 업무수첩과 진술(이하 '피고인 2의 업무수첩 등'이라 한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피고인 1에 대한 소송절차의 위법 여부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생략)
라) 박◆혜 정부의 ○○○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죄형법정주의, 유추·확장해석금지, 공소장일본주의, 특검법 관련 규정의 해석, 특별검사와 파견검사의 권한, 공소권 남용, 피고인의 방어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등 형사소송절차와 피고인의 권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보의 재정 없이도 파견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5.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 인계 (안 제10조제6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⑤ (생략)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⑤ (생략)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u>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u>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⑥ ----- ----- ----- ----- <u>다른 법률에</u> <u>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u> <u>수사본부에 인계하여야 한다.</u> ----- ----- ----- ----- -----.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u>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u>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⑦ ----- <u>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검사의 지휘</u> <u>하에</u> ----- ----- ----- -----.

- 개정안은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현행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것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하고(안 제10조제6항),

사건을 인계 받은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검사의 지휘 하에 신속히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7항).

○ 상설특검법⁹⁾ 및 현행법은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검찰청법」¹⁰⁾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인계받더라도 수사 진행에 제약이

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간 등)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10)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은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도록 하며, 특별검사의 지휘아래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6. 형벌 등의 감면 규정 신설(안 제2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정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 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할 때’,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및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정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신설)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매우 중요하나 현행법에는 자수 등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벌을 감수하고 진술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안 제25조를 신설함으로써 동 특검법의 제정 목적에 따른 진상규명 및 수사를 원활히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문 의 처
02) 6788-5060

※ 참고자료

1. 개별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 제정·시행 연혁

법 률 명	본회의 의결일	공포일·시행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6.5.	2025.6.10.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6.5.	2025.6.1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6.5.	2025.6.10.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에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2.4.15.	2022.4.26.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8.5.21.	2018.5.2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6.11.17	2016.11.22.
이명박 정부의 내국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2.9.3.	2012.9.21.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2.2.9.	2012.2.22.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0.6.29.	2010.7.1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7.12.17.	2007.12.28.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7.11.23.	2007.12.10.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5.6.30.	2005.7.21.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2003.11.10.	2003.12.6.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2003.2.26.	2003.3.15.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2001.11.22.	2001.11.26.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1999.9.20.	1999.9.30.

* 역대 특별검사법의 주요 내용 비교는 [참고자료2] 참조

**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은 2021. 4. 2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한 경우 1건이 있음.

2. 역대 특별검사법 주요내용 비교

구분	조폐공사·산업 및 에너지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임 명 절 차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지체없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미의뢰 시 국회의장이 의뢰)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미의뢰 시 국회의장이 의뢰)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2일 이내 (미의뢰 시 국회의장이 의뢰)
	③대한변협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좌동)	(좌동)	③대한변협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③대법원장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③대한변협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③대법원장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③대법원장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③대법원장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민주통합당 의 특검후 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 특검 후보 추천 위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더불어민주 당·국민의 당의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정의 의 의원모 의 의원모 일이 대한 변협 추천 4인 중 특 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 교섭 단체 합의로 법 원 행정 처 장 및 대 한변협 회 장이 각각 2인씩 추천 한 4인 중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 더불어민 주당 및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설단 체가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③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 없는 정당 및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 설단체가 특검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③ 더불어민 주당 및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설단 체가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 을 경우 연장 자 임명)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 을 경우 연장 자 임명)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 을 경우 연장 자 임명)

구분	조폐공사·산업 및 오토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촉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일반	자격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좌동)	(좌동)	10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판사 검사 법조경력 변호사 또는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①15년 이상 법 조 경 력 판사·검사· 변호사 ②15년 이상 변호사 자 격 보유하고 공공기 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 종사 또는 대학 의 법률학 조교수 이 상 재직	(좌동)	(좌동)
	결격사유	①공무원 ②법 시행 전 1년6월 이 내에 공무원 이었던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 결격자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 결격자	(좌동)	(좌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가 진적 있는자 ④공무원 결격자	(좌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 결격자	(좌동)	(좌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가 졌던 자 ④공무원 결격자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특검임명 전 1년 이내 공무원 이 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자 또는 특검임 명전 1년 이내에 당적 가졌던 자 ⑤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 결격자	(좌동) +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	(좌동)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특검임명 전 1년 이내 대통령 비 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직에 있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자 또는 가졌던 자 ⑤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 결격자	(좌동)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특검임명 전 1년 이내 공무원 이 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자 또는 가졌던 자 ⑤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 결격자
	특별 검사보	①10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10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좌동)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좌동)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좌동)

구분	조폐공사사업 및 오토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②특별검사의 2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1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4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4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판·검·사 비경력자 1인 이상)	②특별검사의 10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5인 임명 (판·검·사 비경력자 2인 이상)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판·검·사 비경력자 1인 이상)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6인)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4인)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4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6인) ③대통령의 3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4인 이내) ③대통령의 4인 이내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6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4인 임명	
특별 수사관	특별검사가 사건당 12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16인 이내 임명	(작동)	특별검사가 사건당 16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2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작동)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5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10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8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권한	①수사협조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2인 이내, 파견공무원 10인 이내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2회 이상 불 응시)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15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15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2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작동)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5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위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5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작동)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5인 이내, 파견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단, 파견요청 전 관계기관장과 협의 의무)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3인 이내, 파견공무원 35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60인 이내, 파견공무원 10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파견 공무원 3명 이상을 공수 처에서 파견 받도록 명시)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40인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파견 공무원 1명 이상을 공수 처에서 파견 받도록 명시)	①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파견 공무원 10분 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 받도록 명시)
수사 기간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②원칙: 3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60일)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②원칙: 60일 ③연장: 30+15일 (대통령승인) (최장 105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칙: 70일 ③연장: 30+2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보고)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보고)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15일 (대통령 보고) (최장 125일)	①준비기간: 7일 (수사금지) ②원칙: 30일 ③연장: 10일 (대통령승인) (최장 4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35일 ③연장: 20일 (대통령승인) (최장 55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90일)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②원칙: 30일 ③연장: 15일 (대통령승인) (최장 45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9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7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7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①준비기간: 20일 (공소 유지 가능 명시) ②원칙: 9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 국회 보고)	(작동)	①준비기간: 20일 (수사 진행 가능 명시)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 국회 보고)

구분	조폐공사·산업 및 유통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촉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④재판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70일)		④재판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40일)
재판 기간	①1심: 3월 ②2심: 2월 ③3심: 2월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①1심: 6개월 ②2심: 3개월 ③3심: 3개월	①1심: 3개월 ②2심: 2개월 ③3심: 2개월	(작동)	①1심: 6개월 ②2심: 3개월 ③3심: 3개월	(작동)	(작동)	(작동)
사건 처리 보고	불기소결정, 판 결확정 시 10 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 회에 서면보 고	(작동)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 발표 가능	(작동)	(작동) 중간수사발표 규정없음	(작동)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 발표 가능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 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법무부장관 에게 서면통지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 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언론브리핑 가능 (피의자·의외 수사과정)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재판 관할	서울지법 합의부 전속 관할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전속 관할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형사소송법」 상 관할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작동)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전속 관할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벌칙	①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①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직무수행 방해: 5년이하 징역	①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①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②공무상비밀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②동행명령 거부: 1천만원이하 벌금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②공무상비밀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②공무상비밀누설: 3년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③수사내용 공표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이하 자격정지										③수사내용 공표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이하 자격정지	③수사내용 공표누설: 3년이하 징역, 5년이하 자격 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작동)	(작동)	(작동)	(작동)	(작동)

구분	조폐공사파업 및 옷로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에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④동행명령 거부 1천만원이하 벌금											④ 직무수행 중 지 특 정 보 소속관 보고 3년이하 징역, 5년이하 자격 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수사최장기간: 170일

※ 특검 최대 규모: 총인원(267인), 특검(1인), 특검보(6인), 파견검사(60인), 파견공무원(100인), 특별수사관(100인)